

금속노조, 포스코 최정우 회장 업무상 과실치사죄 등 고발

2018년 이후 포스코 원·하청 노동자 17명 사망·정부, 포스코 눈치 보며 형식 감독 의혹

금속노조가 포스코 최정우 회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검찰에 고발했다.

포스코에서 올해 중대재해 세 건으로 노동자 다섯 명이 사망했다. 포스코 원·하청 노동자들이 매년

산업재해·직업성 질병 등으로 죽어가지만, 포스코의 노동안전보건 시스템의 변화는 없고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는 12월 23일 오전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앞에서 ‘살인기업 포스코 최정우 회장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죄 고발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노동자들이 포스코에서 죽임을 당하고 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있다면 죽지 않았을 생명이었다”라며 “포스코는 적반하장 강도가 매를 든 격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규탄했다.

김호규 위원장은 “재해와



질병에 무방비로 노출된 포스코 노동자를 살리는 안전보건 시스템 마련하기 위해 금속노조가 포스코 현장에 직접 들어가야 한다”라면서 “제대로 점검하고 바뀌어야 한다. 노동자와 시민이 매를 들어 포스코와 최정우 회장을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조 광주전남지부는 기자회견을 통해 “11월 24일 광양제철소 폭발 사망사고는 2014년 3 연주공장의 고압산소 폭발 사망사고와 판박이다”라며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 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 최정우 회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처벌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노조 포스코지회에 따르면 노동부는 광양제철소 특별감

독에 금속노조와 노조가 추천한 전문가의 참석을 거부했다. 노동부는 포스코의 눈치를 보며 지회 참가인원도 제한하고 있다. 지회는 “포스코는 근로감독 기간만 때우면 된다는 식의 대처에 급급하다”라며 “노동부 머리 꼭대기에 포스코가 올라앉아 있다”라고 지적했다.

2018년 7월 최정우 회장 취임 이후 매년 사망사고가 발생해 최소 열세 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것으로 집계하고 있다. 네 명이 사망한 2018년 1월 포항제철소 산소공장 사고까지 포함하면 삼 년 동안 열일곱 명의 원·하청 노동자가 사망했다.

포스코는 2019년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선정한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뽑혔다.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포항제철소에서 질식, 화재, 폭발, 추락, 협착 등으로 끊임없이 노동자의 죽음이 이어지고 있다.

포스코 관련 직업·환경성 암 환자 직접 찾는다

노조, 전수조사·안전보건진단 촉구 ... “제철소 등 직업성 암 판정 터무니없이 적다”

금속노조가 포스코와 문재인 정부를 상대로 직업성암 전수조사와 안전보건진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노조는 직업성·환경성 암 환자 찾기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금속노조, 포스코지회와 <직업성·환경성 암 환자 찾기 119>는 12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포스코 직업성암 전수조사와 안전진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는 포스코가 직업성암 발생률이 매우 높은 제철소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 동안 직업성암 관련 산재 신청이 네 건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2017년 국립환경과학원이 실시한 ‘국가산단 지역 주민 환경오염 노출과 건강 영향 감시사업 종합평가’에 따르면 포항산단 주민들의 전국 대비 암 사망률이 1.3배에 이르고, 주민 생체 모니터링 결과 대기오염 노출도 전국 평균의 1.72배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노조는 포스코 노동자와 산단 주변 주민에 대한 직업성·환경성암 전수조사와 환경개선 대책이 시급하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노조는 특별근로감독과 안전보건진단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11월 24일 광양제철소에서 폭발사고로 세 명이 죽고 12월 9일에 포항제철소에서 노동자 한 명이 떨어져 죽었다.

사람 죽는데 한가한 정부

노동부는 당연히 시행해야 할 특별근로감독 대신 정기근로감독을 벌인다고 밝혔다. 포스코 현장에서 2016년부터 올해까지 24건의 중대 재해로 19명이 사망했지만, 매년 형식적인 조사와 대책 발표로 산재 사고는 증가했다.

이윤근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소장은 기자회견에서 전문가가 참여하는 특별 안전보건진단을 시행하라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윤근 소장은 “인구가 비슷한 이탈리아는 직업성암 사망자가 1만여 명이고 영국은 1만 3천 명이다. 한국은 2019년 기준 사망자가 125명이고, 신규

직업성 암 환자는 250명에 불과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윤근 소장은 “전문가들은 앞으로 직업성암 환자 규모는 2,500~3,000명으로 수준으로 급격하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윤근 소장은 “석탄과 철광석, 비소, 니켈, 석면, 벤젠 등 발암물질을 다루는 포스코는 암 환자가 발생할 수 있는 완벽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포스코는 모든 발암물질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전문가 조사를 허용하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수정 노조 부위원장은 “포스코는 산업재해와 발암물질로 노동자를 병들어 죽게 만들고 있다. 노동부는 마땅히 유해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발암물질에 노동자들이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라며 정부에게 책임을 물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통계상 한국 직업성 암 환자는 전체 암 환자의 0.2%에 불과하다. 노동안전보건 전문가는 선진국 일반 암 중 직업성암 비율 4%를 적용하면 한국은 통계의 60배에 달하는 매년 9,600명이 직업성암 판정을 받아야 한다고 추정한다.